

2020, 지방직 9급 행정학(B책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지방직 9급 행정학은 다행스럽게도 어려운 문제없이 난도 중, 하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단답형 수준의 문제, 개념을 묻는 문제, 유형이나 분류를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난이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하이패스 행정학 강의'와 함께 행정학을 심도 있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출제된 모든 문제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동형모의고사로 반복적으로 접근해 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당부드릴 것은 2020년 지방직 9급 시험의 난도 낮은 출제가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다음 국가직 시험에서도 난도 낮은 출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서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출제영역

행정학총론	행정환류론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5	1	4	3	3	2	2

* 출제경향

기본 개념	이론 이해	제도 이해	법령 문제	기타(학자, 연혁, 사례 등)
8	8	2	1	1

01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 ④ 신공공관리론

정답 ④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대두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작은 정부 구축을 지향한다. 반면,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일원론(①),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③)는 모두 크고 강한 정부(Big & Strong)를 지향하는 행정국가와 관련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44

핵심체크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구분	작은 정부 - 근대입법국가(19C)	큰 정부 - 행정국가(20C)
의의	입법부 우위의 국가체제	행정부 우위의 국가체제
대두배경	부르주아 혁명(시민혁명)	대공황 및 1,2차 세계대전
사상	자유방임주의, 시장주의, 무국가주의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정치	의회만능주의	대중민주주의, 행정권의 강화
행정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일원론
경제	• Smith의 국부론(예정조화설) • 공급이 수요를 창출(Say의 법칙)	• Keynes의 유효수요이론 • 수요가 공급을 창출
사회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	국가와 사회의 동질화
정부관	• 작고 값싼 정부(Small & Cheap gov) • Jefferson-Jackson 패러다임(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 크고 강한 정부(Big & Strong gov) • Roosevelt의 New Deal 정책 • Johnson의 Great Society 정책
경제정책	규제완화, 세금감면, 사회복지정책 폐지 등	소득재분배정책, 사회보장정책, 정부규제 옹호
문제점	시장실패	정부실패

0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 ① 팀제 조직
- ② 위원회 조직
- ③ 매트릭스 조직
- ④ 네트워크 조직

정답 ③ 매트릭스 조직은 계서적 특성을 지닌 기능구조와 수평적 특성을 지닌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통합)을 시도한 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443

핵심체크 매트릭스 조직

의의	계서적 특성을 지닌 기능구조(직능 조직)와 수평적 특성을 지닌 사업구조(프로젝트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특징	• 기능구조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구조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원적 권한체계를 지닌 조직구조 • 기능구조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이 모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구조 • 조직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기능적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중명령을 받는 조직구조(명령계통의 다원화)

0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정답 ② 지방재정의 세입과목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원을 말하며, 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이에 속한다.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 중에 하나이다. 의존재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해주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①)와 국고보조금(④)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주는 의존재원이며, 조정교부금(③)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전해주는 의존재원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824**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자주재원	지방세	보통세(9개), 목적세(2개)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분담금,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등)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장려적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채		과세권을 담보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부담행위

0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 ①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②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③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④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정답 ① 설문은 선입견에 의한 오류이다. 평정요소와 관계없는 성별·출신학교·출신지역·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616**

핵심체크 평정오류

연쇄효과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현상(halo-effect, 후광효과)
집중화·관대화·엄격화 경향	- 집중화(중간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중간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 - 엄격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낮은 쪽에 집중되는 경향 - 관대화 : 평정 결과의 점수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
규칙적 오류·총계적 오류	- 규칙적 오류(일관된 오류) : 특정 평정자의 평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후하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 - 총계적 오류(불규칙적 오류)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최초효과·근접효과	- 최초(첫머리)효과 : 초기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 막바지효과(근접오류) : 최근의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
상동적 오차	평정요소와 관계가 없는 성별·출신학교·출신지역·종교·연령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선입견에 의한 오류,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
기타	대비착오, 유사착오, 투사에 의한 착오, 기대성 착오, 논리적 오차, 선택적 지각의 착오, 방어적 지각의 착오, 근본적 귀속의 착오, 이기적 착오 등

0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 ②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 ③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④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③ 파레토 최적 상태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효율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345

핵심체크 능률성(효율성) 평가 기준

파레토 효율 기준	특정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가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익을 보는 자가 있다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대안채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준
칼도-히크스 기준	특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총효용이 총손실보다 크다면 늘어난 효용으로 손실을 보 상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대안채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준

0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 ②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③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 ④ 기계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정답 ② 비정형화된 기술은 직무수행이 복잡하여 수평적 분화(복잡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14

핵심체크 페로우(Perrow)의 기술유형론

구분		과제 다양성					
		낮음(소수의 예외)			높음(다수의 예외)		
분석 가능성	낮음 (분석 불가능)	장인기술(craft) : 고급유리그릇 생산			비일상적 기술 : 핵추진장치		
		조직구조	정보기술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정보기술	조직구성원
		- 대체로 유기적 - 중간의 공식화 - 중간의 집권화 - 중간의 통솔 범위	- 소량의 풍성한 정보 - 하이터치 - 개인적 관찰 - 면접회의	- 작업 경험 - 수평적,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언어) - 하급 관리층의 재량과 권력이 큼	- 유기적 구조 - 낮은 공식화 - 낮은 집권화 - 적은 통솔범위	- 다량의 풍성한 정보 - 하이테크 및 하이터치 - 면접회의, MIS, DSS	- 수평적 의사소통 - 회의훈련 및 경험 - 하급관리층과 중간관리층 재량과 권력이 큼
	일상적 기술 : 표준화된 제품 생산			공학기술 : 자동차 엔진 생산			
	높음 (분석 가능)	조직구조	정보기술	조직구성원	조직구조	정보기술	조직구성원
- 기계적 구조 - 높은 공식화 - 높은 집권화 - 넓은 통솔 범위		- 소량의 분명한 계량적 정보 - 보고서, 규정집, 계획표 - TPS	- 적은 훈련 및 경험 - 수직적,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 중간관리층과 하급관리층 모두 재량이 작음	- 대체로 기계적 - 중간의 공식화 - 중간의 집권화 - 중간의 통솔 범위	- 다량의 계량적 정보 - 하이테크 - 데이터베이스, MIS, DSS	- 공식 훈련 - 문서 및 구두에 의한 의사소통 - 중간관리층의 권한과 재량이 큼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정답 ① 설문은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사무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정부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기초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광역정부에게, 광역정부도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중앙정부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813

핵심체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

현시성의 원칙		주민통제가 용이한 기초정부에 가능한 한 많은 사무가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소극적 의미	가능한 한 많은 사무를 기초정부에게 부여해야 하며, 기초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정부에게, 광역정부도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만 중앙정부가 처리한다는 원칙
	적극적 의미	중앙정부는 자치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재정적 여건 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에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능률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불경합의 원칙		국가와 각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책임명확화의 원칙, 이중배분금지의 원칙)
종합성의 원칙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는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지역특수성의 원칙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사무는 그 지역 자치단체가,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해관계귀속의 원칙)
계획·집행 분리의 원칙		계획 및 결정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집행은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경비부담능력의 원칙		지방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도 동시에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④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은 결정자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정책 중심적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집행자인 하위직보다는 결정자인 고위직이 정책집행과정을 주도한다(ㄷ). 또한 정책결정자는 자신이 결정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성공적 집행요소로 본다(ㄹ). 반면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은 집행자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행위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현장에 초점을 맞추며(ㄱ), 집행관료인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ㄴ).  하이패스 행정학 p328

핵심체크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

의의	- 상위조직에서 형성된 정책이 하위조직에서 기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하고, 결정자의 관점에서 집행현상을 설명하는 정책 중심적 접근 - 정책이 최초 결정되는 시점에서부터 정책결과가 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기술	
특징	연구대상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이 하위조직에 의해 실현되는 과정
	집행과정에 대한 시각	- 정행이원론 관점에서 집행을 결정된대로 집행되는 비정치적·기술적·기계적 과정으로 이해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관계 인정) - 결정과 집행의 단일방향적 과정 중시(단계주의적 모형)
	집행성공기준	공식적인 목표 달성도, 결정자의 의도 실현, 집행의 충실성 등
	집행성공 요소	결정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집행자의 행동 통제(통제모형)
	연구방법	거시적·연역적 접근 - 모든 정책에 적용가능한 성공적 집행의 조건 규명
	주요학자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 등

09

조직구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업의 원리 - 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 ④ 조정의 원리 - 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정답 ③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원은 누구나 자신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조직원은 두 사람의 상관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418

핵심체크 조직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조직 내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 조직단위 간 지휘·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것(직원·과장·국장·장관)
분업(전문화)의 원리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 주된 업무만 분담시킴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원리
조정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정연하게 결합하고 배열하는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조직구성원은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원리 또는 조직구성원은 두 사람의 상관을 섬겨서는 안된다는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상관 또는 감독자가 그의 주의력과 능력에 비추어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또는 조직단위의 수에 대한 원리 - 부성화(부처편성)의 기준
부처편성의 원리	조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편성의 기준을 밝히고자 하는 원리 - 목적·기능별 분류, 과정·절차별 분류, 대상·고객별 분류, 지역·장소별 분류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 ② 계약제 임용제도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④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젊은 인재에게 개방하고 평생토록 근무케 하는 제도로 폐쇄적 충원, 강한 신분보장(정년보장),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다.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적 충원과 정년보장은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인사행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①)와 계약제 임용제도(②)는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적 충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며, 계급정년제(③)는 직업공무원제의 정년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직업공무원제의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야 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547

핵심체크 직업공무원제

의의	공직을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하고 그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능력발전에 따라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연원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절대군주주의 시대부터 체계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상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상 제도적 보장
확립요건	①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요건), ②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③ 유능한 젊은 인재의 채용(학력과 연령 제한) 및 강력한 신분보장, ④ 장기적 발전가능성 및 능력발전 중시, ⑤ 적정한 보수(생활급) 및 연금제도의 확립, ⑥ 장기적인 인력계획의 수립, ⑦ 폐쇄형 인사제도, ⑧ 정치적 중립, ⑨ 일반행정가주의
장점	①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제고(전문직업주의 확립), ② 행정의 중립성·공익성 제고, ③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제고, ④ 공무원의 질적 향상에 기여, ⑤ 근무규율 수용도 제고, ⑥ 재직공무원의 사기 제고, ⑦ 고급공무원의 양성에 유리, ⑧ 관료제의 구성원리에 부합 등
단점	① 강력한 신분보장, 일반행정가주의 등으로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저해, ②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정치적·민주적 통제 곤란, ③ 권료주의화·특권집단화, ④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저하, ⑤ 민주주의 평등이념과 충돌, ⑥ 퇴직시 직업전환 곤란 등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 ① 통제 ② 관리 ③ 기획 ④ 감축

정답 ③ 설문은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기획기능을 강조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707

핵심체크	계획예산제도(PPBS)
개념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한 예산
도입	랜드 연구소의 노빅, 히치, 맥킨 등의 제안에 따라 맥나마라 장관이 국방성에 도입, 이후 존슨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1965년)
편성	① 장기계획의 수립(planning : 목표설정) → ② 사업구조의 형성(programming : 시스템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범주, 하위 범주, 프로그램 요소 작성) → ③ 예산편성(budgeting)
특징	① 목표지향적 예산, ② 장기적 예산, ③ 하향적·거시적 예산, ④ 합리적 예산, ⑤ 계획책임의 집중화, ⑥ 효과성과 능률성 중시, ⑦ 과학성·객관성 추구(비용편익분석 등 객관적인 회계기법 활용), ⑧ 개방체제적 성격(부처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체제적 관점에서 예산편성), ⑨ 전문가의 역할 중시, ⑩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관심, ⑪ 정책별 예산배분(예산을 부서별로 배분하지 않고 정책별로 배분)
장점	① 최고 관리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②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③ 장기사업 중심의 예산, ④ 체제적 관점, ⑤ 객관적 의사결정(체제분석기법의 활용), ⑥ 목표·계획·사업의 유기적 연계, ⑦ 연동계획과 연계시 신축성 제고
단점	① 목표설정 곤란, ② 중앙집권화 야기, ③ 사업구조와 예산과목 구조의 불일치로 인한 복잡한 환산작업 야기, ④ 재정민주주의와 충돌(국회의 지위 약화 초래), ⑤ 환경변화의 적응 곤란(장기사업의 구속력으로 인한 경직성), ⑥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요구, ⑦ 지출내역 파악 곤란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 ① 행정의 전문성 결여 ②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 계급 간 차별 심화 ④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정답 ② 직위분류제란 공직을 직무의 성질 및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는 전문화된 분류체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융통성이 제약되어 조직 내 인력배치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전문화된 분류체제이기 때문에 직무경계가 명확하고(④),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며(①), 수직적 융통성이 높아 등급 간의 차별이 없다(④).

☞ 하이패스 행정학 p563

핵심체크 직위분류제

의의	공직을 직책 중심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직무중심의 공직제도)
발전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미국에서 발달
발달배경	① 사기업의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 ② 보수의 불평등 제거, ③ 산업사회의 전통과 실적주의의 발전, ④ 업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 ⑤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 개혁운동[Taft위원회]의 일환
특징	① 등급의 세분화, ② 낮은 계급의식, ③ 인사행정의 객관화·합리화, ④ 전문행정이 지향성, ⑤ 개방형 충원 제도, ⑥ 낮은 수평적 융통성, 높은 수직적 융통성 등
장점	① 직무급 확립을 통한 보수의 형평성 제고, ② 행정의 전문성 향상, ③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 제공, ④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수요 파악, ⑤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⑥ 효율적인 사무관리 및 정원관리, ⑦ 예산행정의 능률화, ⑧ 행정의 민주적 통제, ⑨ 공직분류와 조직구조의 연계, ⑩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
단점	① 일반행정이 양성 곤란, ② 인사행정의 탄력성과 신축성 결여, ③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적응 곤란, ④ 업무협조와 조정(업무 통합) 곤란, ⑤ 약한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 곤란, ⑥ 편협한 안목과 직위관리의 고립화, ⑦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 및 연대감 저해, ⑧ 직위분류의 주관성, ⑨ 투입 중시·산출 경시 등

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헌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 ① 외부통제란 정부관료제(행정부) 외부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내부통제란 정부관료제(행정부) 내부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내부통제기관이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199

핵심체크 행정통제

구분	공식통제	비공식통제
내부 통제	• 행정수반 및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 계층제(상관)에 의한 통제 •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의한 통제 •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근평제도에 의한 통제 • 감찰통제, 예산통제, 정원통제 등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 •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 공익에 의한 통제
외부 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 민중통제 및 언론통제 • 정당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 및 고객에 의한 통제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① BTO(Build-Transfer-Operate) ② BTL(Build-Transfer-Lease)
③ BOT(Build-Own-Transfer) ④ BOO(Build-Own-Operate)

정답 ② 설문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이다. BTL은 임대형 민자유치로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정부는 민간투자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Lease)하는 방식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161](#)

핵심체크 민자유치의 유형

BTO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민간이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OT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소유권(Own)을 가지고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방식
BOO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 완공 후 민간이 소유권(Own)을 가지고, 직접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정부가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Lease)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LT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 완공 후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정부에게 임대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대신 임대료를 지급(Lease)하도록 하며, 운용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Transfer)받는 방식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④ ㄴ, ㄷ은 맞고 ㄱ은 틀리다. 정책평가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행의 조건, 공동변화의 조건, 경쟁적 가설 배제의 원칙이 갖춰져야 한다. 경쟁적 가설 배제의 원칙이란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ㄴ). 공동변화의 조건은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ㄷ). [☞ 하이패스 행정학 p349](#)

오답정리

ㄱ. 시간적 선행의 원칙이란 정책수단의 실현이 정책목표의 달성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체크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조건

의의	독립변수(정책수단)가 종속변수(정책목표)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어지는 관계	
인과관계 증명 조건	시간적 선행의 조건	시차적으로 정책(독립변수)이 목표달성(결과변수)에 앞서야 함
	공동변화의 조건	정책집행(원인변수)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정책 결과(결과변수)의 변화 방향과 일치해야 함(공변성, 연관성)
	경쟁적 가설 배제의 조건	정책결과는 오직 해당 정책(원인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야 하며, 제3의 변수는 배제되어야 함(비허위성)

16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 ②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 ③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 ④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단위가 화폐가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종 사업들)도 비교할 수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298

핵심체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구분	비용편익분석(B/C)	비용효과분석(E/C)
측정단위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	비용은 화폐단위, 편익은 측정 가능한 단위
성격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중점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효과성 분석(자원활용의 효율성 분석)
유형분석	가변비용과 가변효과의 분석에 사용	고정비용과 고정효과의 분석에 사용
장점	• 이종사업 간 비교 가능 • 비용과 편익의 직접적 비교 가능	• 계량화가 불필요하여 사용 간편 •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 분석 용이 • 공공부문에 보다 적합
단점	• 편익의 계량화 곤란 • 외부경제 및 불가측가치 분석 곤란 • 시장가치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의존	• 이종사업 간에 비교 불가능 • 비용과 편익의 직접적 비교 불가능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ㄴ, ㄷ은 맞고 ㄱ, ㄹ은 틀리다. 점증주의 모형은 조금의 변화만을 추구할 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유지를 옹호하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ㄴ).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우연한 결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ㄷ). 하이패스 행정학 p301~312

오답정리

- ㄱ. 혼합주사모형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②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③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민간에게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서 생기는 조세수입의 상실분으로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특혜세율, 세부담 이연 등을 말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676

핵심체크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

조세지출	개념	정부가 민간부문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서 생겨나는 조세수입의 상실분(조세우대 조치)
	특징	• 숨겨진 보조금 :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지출(간접지출) • 합법적인 세수손실 : 불법적인 탈세는 포함되지 않음(합법적 탈세) • 높은 경직성 :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예산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높음 • 정치적 상호작용 : 일종의 특혜로 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관심대상 • 자의성 : 조세감면의 근거법에 집행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할 경우 조세지출에 있어 관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조세지출예산	개념	조세지출을 보조금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출예산의 형태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원	서독에서 최초로 도입,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도입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 : 기재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모두 맞는 지문이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란 컴퓨터·전자장비·센서·칩 등의 전자공간(기술)이 종이·사람·집 및 자동차 등의 물리공간(생활)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모든 사물과 대상이 지능화되고 전자공간에 연결돼 사용자는 그 기술의 존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어떤 서비스든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ㄱ).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서비스는 편재성·상시성(Ubiquity), 고객맞춤화(Uniqueness), 지능화(Intelligence) 등을 특징으로 한다(ㄴ).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은 5C(Computing, Communication, Connectivity, Contents, Calm)의 5Any(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를 지향한다(ㄷ).  하이패스 행정학 p176

핵심체크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컴퓨터·전자장비·센서·칩 등의 전자공간(기술)이 종이·사람·집 및 자동차 등의 물리공간(생활)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모든 사물과 대상이 지능화되고 전자공간에 연결되어 사용자는 그 기술의 존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어떤 서비스든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구분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e-Gov)	유비쿼터스 기반 전자정부(u-Gov)
웹	web 1.0, 유선인터넷 망 기반 전자정부	web 2.0 기반(무선망)을 넘어선 web 3.0 전자정부
기술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술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서, 칩, 브로드밴드
접속성	사용자 확인이 가능한 고정된 장소에서 이용(사·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유선망 중심)	편재성·상시성(Ubiquity) :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으로 언제·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준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서비스 제공	고객맞춤화(Uniqueness) : 개인별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호작용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로 상호작용	지능화(Intelligence) : 센서나 태그가 환경·사물·사람에 관한 상황 인식정보를 감지해 직접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재난의 사전예방)
추구가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신속성 등	개인별 고객지향성, 형평성, 지능성, 실시간성 등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③ ㄱ, ㄴ은 맞고 ㄷ은 틀리다. 민원행정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될 수 있다(ㄴ).  **하이패스 행정학 p163**

오답정리

ㄷ. 국민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핵심체크

민원행정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기능	① 경계작용기능, ② 행정통제기능, ③ 행정구제기능, ④ 주민참여기능 등
민원인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 •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